

헌 법 (5 급)

(과목코드 : 131)

2024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다음 중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헌헌법(1948년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였다.
- ② 제3차 개정헌법(1960년 헌법)은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 및 각급의 선거관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 ③ 제5차 개정헌법(1962년 헌법)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제8차 개정헌법(1980년 헌법)은 행복추구권, 연좌제 금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환경권, 적법절차원리를 신설하였다.

2. 다음 중 현행헌법의 ‘헌법개정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00명 중 150명 이상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의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 ③ 헌법 제130조제2항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재외국민에 대하여 배제하였더라도 이를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
- ④ 현행헌법은 헌법개정의 한계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3. 다음 중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의 본질적 기능과 기본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은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정당 후보자에게 무소속 후보자보다 우선순위의 기호를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정당법상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 정당의 명칭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정당명칭사용 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③ 정당의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의 법정 당원 수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4. 다음 중 군사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의 관할이 아니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군사재판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다.
- ③ 관할관 확인제도와 심판관 관련 규정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 ④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할 수는 없다.

5. 다음 중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입법에 관한 헌법의 규정은 그 형식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 ② 감사원규칙은 현행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행정입법의 형식이다.
- ③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은 행정입법이 아닌 대법원규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다음 중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5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③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7. 다음 중 선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8. 다음 중 헌법상 보장된 ‘독자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헌법 제10조와 제36조제1항, 제34조제4항 등을 근거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 ②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서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를 규정한 것은 독자적 기본권인 세대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에 해당한다.
- ④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독자적 기본권인 혼인 외 출생자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

9. 다음 중 ‘법원’과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예외적인 재판권을 정한 헌법 제27조제2항의 ‘군용물’에는 ‘군사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으로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③ 군사법원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에 대하여 신분적인 재판권을 가진다.
- ④ 법관이 탄핵심판 계속 중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10. 다음 중 정당의 자유와 정당해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한 ‘정당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정당에 해당하며 오로지 헌법재판소가 그의 위헌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정당은 정치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축출될 수 있다.
- ②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정당의 개념표지라 할 수 있다.
- ③ 1958년 진보당이 강제해산된 사례가 있으나, 이것은 행정청(공보실장)의 직권에 의한 것이었다.
- ④ 정당해산사유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헌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널리 가리킨다.

11. 다음 중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 ②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부칙에 의해 시행령이 효력을 지속하고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 ③ 군정법령은 군정장관의 명의로 공포된 법령(Ordinance)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12. 다음 중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원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③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13. 다음 중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내부적 분쟁도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달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해당 지역의 사무에 국한되므로, 정치자금법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배제하였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의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군인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보장하고 연금과 보수의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4.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 규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②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5.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죄형법정주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에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 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비안마사들의 안마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입법형성자유 범위 내에 있다.
- ④ 기소유예처분 후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결정 당시 시행 중인 신법을 기준으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6. 다음 중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청구권은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므로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외국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지만, 공법인적 성격과 사법인적 성격을 겸유하는 학교안전공제회는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청구권에는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을 받지 아니할 소극적 측면이 모두 포함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나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이의 접견교통권의 보장은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 ④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한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포함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17. 다음 중 ‘소급처벌금지원칙’ 내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인 노역장 유치에는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된다.
- ② 가석방 요건에 관한 규정은 행위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여 수령한 연금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헌법 제13조제1항·제2항이 명문으로 금지하지 않은 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18. 다음 중 ‘선거권’과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회복지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를 하게 하는 병역법 조항은 사회복지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거권을 침해한다.
- ③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고 그 자체가 헌법적 목표는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④ 선거운동의 개념은 ‘특정한’ 또는 적어도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당선·낙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선거운동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19. 다음 중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작용은 헌법 그 자체에 의한 유보가 없는 한 오로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만이 담당할 수 있고 또 행정심판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의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한다.
- ② 외교사절의 재판면제특권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한 것이고, 우리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국제관습법상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재판권이 면제되나 사법적(私法的)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④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유신헌법 제53조제4항은 현행헌법에 저촉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20. 다음 중 근로의 권리 및 노동3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②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③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 다음 중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역군인에게만 국방부의 보조기관 등에 보해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군무원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였더라도, 이를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에 포함된 ‘공무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②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월 간 승진임용을 제한하였더라도, 공무원의 승진기회의 보장까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이라고는 할 수 없다.
- ③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 대담·토론회의 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인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④ 국가정보원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과 비교하여 군인사법상 부사관의 최초 임용연령을 27세까지로 차별한 경우, 평등권에 관한 심사에서 공무담임권에 대한 심사까지 중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22. 다음 중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의 보장 및 개인의 자유권으로서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 ②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에는 특별법상의 광업권이나 관행 어업권이 포함된다.
- ③ 상속권도 재산권에 속한다.
- ④ 피수용자가 일정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은 아니다.

23. 다음 중 ‘평등권’ 내지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퇴직 이후에 비로소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급여수급권을 가지는 일반 공무원이나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달리, 상이연금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 ② 헌법 제32조제6항의 적용대상에는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만 포함되며, 여기에 ‘국가유공자의 가족’까지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헌법 제32조제6항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취업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근거라고 볼 수 없다.
- ③ 제도의 개선을 시작하는 시점의 선택에는 입법자에게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그 유족들에 대한 지원 여부를 차별취급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한 차별취급은 헌법 제36조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차별취급에 대해서는 엄격한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4. 다음 중 ‘근로권’과 ‘단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로권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가구 내 고용활동’을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여 가사사용인을 다른 근로자와 차별취급 한 것은 헌법 제32조제4항이 금지하는 근로 영역에서의 여성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헌법 제21조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④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을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25. 다음 중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관으로서 세입·세출결산,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합목적성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조치를 내린 경우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예상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자치구에 통보한 행위는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